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열린캠프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어제 한 언론이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연속으로 제작된 기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상관인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피해자로 하고, 윤 전 총장에 비판적이던 정치인들과 그의 부인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하고 있던 기자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권력인 검찰의 칼을 검찰총장 개인의 정적을 제거하고, 검찰총장의 부인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휘두르려 했고, 이를 위해 야당에 손을 뻗었다는 얘깁니다.

참고로 손준성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작년 말 소위 '세평 수집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윤 전 총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손 검사는 '재판 스타일'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게 맞지만 문제가 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과 같은 세평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 검사의 제안은 일단 고발만 되면 수사를 통해 야당도 좋고 검찰도 좋은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압수수색, 검찰 출석, 망신주기 등 어떤 장면을 연출하려 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보고 듣고 경험해 왔기에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시점이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고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4월인 것도 이러한 의혹을 더 키웁니다.

마치 과거 공안 검사들이 시국 사건을 '기획'했던 것처럼,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여 완전히 짜맞춰진 사건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듭니다.

누구를 고발할지, 어디에 접수할지, 어떤 법으로 엮을지를 모두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전달책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전달한 사실까지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의혹입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통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대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합동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당정치마저 무력화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야당도 반드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행여나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유신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음습한 정치공작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동시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한 정치개입을 상상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도 계속 갖춰 나가겠습니다.

2021년 9월 3일

열린캠프 소속 의원 일동